

# 尹, 연내 인적쇄신 마무리 전망... ‘정치인 총리’ 필요 목소리

외교일정·예산정국 이후 단행할 듯 장수 국무위원 등 개각 폭 커질수도 총리 교체 시, 민주당 등의 필요 인맥 있는 추경호·추경호 등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중앙아시아 순방 때 선물로 받은 투르코메니스탄 국견 알라바이 해피(왼쪽)와 조이를 산책시키고 있다. /대통령실

임기 후반기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쇄신을 연내 마무리할 전망이다. 인적쇄신의 범위는 내각과 대통령실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면전환용’ 인사를 하지는 않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장수 장관들을 교체해 하반기 국정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 인준이 비교적 수월한 ‘정치인 출신 총리’도 언급되고 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현 정부에서 장수 장관들에 대한 개각이나 대통령실 인사 일부 개편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임기 반환점을 맞는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이 들어가 있다”면서 “시기는 좀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일단 윤 대통령은 14일부터 5박8일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남미로 떠난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정부 측의 대응도 모색해야 한다. 2025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도 앞두고 있다.

이에 물밑으로 인적쇄신 준비를 한 후, 예산정국 이후 내달 중순 이후에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통령실

의 일부 인사 교체도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난 11일 취재진에게 인적쇄신 시기에 대해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도 있어야 되고, 해외 순방 일정 등이 지금 잡혀 있다”면서 “당분간은 외교의 시간이라고 봐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예산안이 통과돼야 민생이 또 잘 돌아가게 된다”면서 “그런 만큼 예산 통과 시점까지는 좀 더 기다려 달라. 쇄신은 서두르겠지만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면전환용’ 인사를 지양하는 편이다. 이에 임기반환점을 둔 현재 한 번도 교체되지 않은 국무위원이 2명(한덕수 국무총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2년 넘게 재임 중이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개각 폭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여권에서도 김건희 여사 의혹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인적 쇄신을 요구한 바 있기에, 이번 개각을 통해 ‘장수 국무위원’이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한 총리가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박정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서 “대통령이 쇄신 의지가 아주 강해 야당 문을 뚫는 도전을 할 것 같다”며 국회 인준 동의가 필요한 총리 교체를 단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총리를 교체하려면 야당과도 인맥을 쌓아온 정치인 출신이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인준이 필수적인 총리를 교체하려면, 17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총리 후보군은 추경호 국회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다.

우선 추경호 부의장의 경우 당의 중진으로서 야당과 원만한 관계를 맺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 특임장관·정무특보 등을 맡으며 청와대와 국회 간 가교 역할을 한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바 있어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원내대표로서 야당 지도부와 접점이 있다는 이유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원희룡 전 장관도 윤석열 정부 장관을 지냈고, 윤 대통령과 교감이 많아서 언급되는 분위기다.

지방자치단체장 발탁설도 나온다. 특히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이라, 이와 맞물려 흥준표 대구시장이나 이철우 경북지사가 거론된다. 흥준표 시장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며 여당의 단일대오를 강조해서, 이철우 지사는 원만한 도정 운영으로 인해 언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野,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출범 활동에 들어갔다. 탄핵연대는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의원들 뜻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탄핵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을 열었다. 탄핵연대에 민주당 27명·조국혁신당 9명·진보당 3명·기본소득당 1명·사회민주당 1명 등 총 4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탄핵연대의 대표는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황은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탄핵연대는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의원들 뜻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탄핵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을 열었다. 탄핵연대에 민주당 27명·조국혁신당 9명·진보당 3명·기본소득당 1명·사회민주당 1명 등 총 4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탄핵연대의 대표는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황은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맡았다. /뉴스시

## “檢 예산 삭감 부당” vs “집회 과잉진압 의혹”

예특위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與 “野, 사법제도 무력화 측면서 삭감” 野 “지난 주말 집회서 경찰 과잉진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예산심사가 열린 가운데, 여당 예결위원은 야당 주도의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삭감을 질타했고 야당 의원은 주말 집회에서 있었던 경찰의 과잉 진압 의혹을 추궁했다.

◆“국회도 특활비·특경비 대규모 사용”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국회도 대규모 특활비·특경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검찰과 감사원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부당하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들 비용이 어디에 쓰였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검찰과 감사원이 요구한 특활비·특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강승규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법사위에서 특활비와 특경비를 삭감하면서 정청래 위원장 등이 4개 검찰 지청에 대한 특경비 사용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고 4개 지청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관련한 내용도 있느냐”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그런 수사가 많이 진행된 지청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이 재차 이 대표와 연관된 것이냐고 묻자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야당의) 검사 탄핵 요구 연장선에서 보면 그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김민기 국회 사무처장에게도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특활비와 특경비 총 규모에 대해서 물었다. 김 처장

은 특활비가 9억8000만원, 특경비가 183억원 평균적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국회는 특활비를 2019년도에 84% 줄여서 9억8000만원”이라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국회도 이렇게 많은 특활비와 특경비를 썼다”며 “그런데 야당이 사법 제도 무력화 측면에서 법무부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감사원도 전액 삭감했다”며 “국회는 얼마나 일을 잘하고 신뢰를 받아서 특활비를 받아서 쓰냐”라고 지적했다.

◆ 집회 과잉 진압 의혹 추궁·집회 예고에 후방탄 질타

문규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주말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과잉 진압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문 의원은 “지난 주말 집회에서 경찰이 과잉진압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보통 경찰에서 허가한 집회 공간이 참가 인원 대비 좁았고, 실제 참가 인원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보통 경찰은 추후 법적 문제를 따지더라도 시민과 국민 보호를 위해 더 넓은 집회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보통인데 불법만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 퇴진 운동을 막기 위한 선제적 포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조 청장은 문 의원의 사과 요구에 대해 “청장으로서 도심 한가운데 통행 마비 사태와 여러 사람이 부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해 책임자로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반면,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번주와 다음주에도 열기로한 서울 도심 집회와 대입 논술 시험이 겹치는 것을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 與野, 예금자보호법 등 민생법안 6개 합의

이견 없이 공감대... 오늘 본회의 상정 대부업법 등 70여건 법안도 심사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6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부업법 등 민생법안 70여건을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의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참석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달 28일 출범한 여야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건축법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 등을 꺼

내들었다. 이 6개 법안들은 여야간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뤄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시한 반도체특별법·인공지능(AI)법·정부조직법과 민주당이 제안한 아이돌봄지원법·서민금융지원법·농업재해 대책법에 대해서는 여야간 일부 이견이 존재해 양당 정책위에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수용 가능한 일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여야는) 대표적으로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지금이라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당 정책위의장이랑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한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수는 대략 70여건이다. 이 법안들을 이번 정기회 때 통과시키고

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민의힘과 추가로 협상할 의제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좀 포 수용할 수 있는 부분 더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겠다고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좀 더 요구하는 조건이 있으니 이를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가 다시 좀 더 검토하면서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늘릴 수 있는지 상의할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이런 법안들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